

Legal Updates

2025년 1월 23일

[트럼프 2.0] Day 3의 주요 행정명령 등 조치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행정명령, 메모, 각서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조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로 전달드립니다.

I. 환경·에너지

Nominations Transmitted to the Senate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2일자로 환경보호청(환경정책 총괄), 에너지부(에너지안보 및 기술확보), 그리고 내무부(석유·가스 시추 및 풍력·태양광 발전 관련 부지 임대 업무 등 토지 관리 총괄) 인사들을 포함한 추가 정부 인선 명단을 상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인사 명단에 포함된 환경보호청, 에너지부, 내무부 인사들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인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환경보호청 부청장(Deputy Administrator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데이비드 포토히(David Fotouhi): 트럼프 1기 당시 환경보호청에서 근무하며 기후규제 및 수자원 보호 조치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
- 에너지부 차관(Deputy Secretary of Energy) 제임스 댄리(James Danly): 트럼프 1기 당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의장 역임
- 내무부 차관(Deputy Secretary of the Interior) 캐서린 맥그리거(Katharine MacGregor):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내무부 차관을 역임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작년 11월에 화석연료 지지자들을 장관 및 청장급 인사로 지명하였는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기후 및 환경 관련 규제들은 후퇴하고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환경보호청 청장 리 젤딘(Lee Zeldin) 전 하원 의원: 석유시추 등의 경제 활동을 막는 친환경 법안에 반대한 인물로, 지명 직후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회복하고,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미국의 일자리를 되찾고, 미국을 AI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에너지부장관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2위 수압 파쇄(fracking: 셰일가스 추출 공법) 전문 기업 리버티에너지(Liberty Energy)의 CEO이자 석유 재벌로, 기후위기는 허구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화석연료의 장점보다 적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내무부장관 더그 버검(Douglas Burgum) 노스다코타 주지사: 미국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 3대 주(州)인 노스다코타의 주지사로, 작년 5월 “바이든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격을 트럼프가 멈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II. 인권

ENDING ILLEGAL DISCRIMINATION AND RESTORING MERIT-BASED OPPORTUNITY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에게 차별 없는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정책 하에 자행되는 불법적인 차별을 종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기관이 실력 기반 시스템 복원을 목표로 인종, 피부색, 성별 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고용 및 계약 관행을 중단하며, 민간 부문도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DEI 관련 행정조치 폐지 및 활동 중단:** 관련 행정명령 및 지침 폐지,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의 다양성 증진 활동 중단 등 기존 DEI 정책 관련 조치들을 무효화함
 - 소수 민족 및 저소득층의 환경 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조치 (Executive Order 12898)
 - 연방 인력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정된 이니셔티브 수립 (Executive Order 13583)
 - 연방 정부의 고용 기회 균등 (Executive Order 11478, 11246, 13672)
 - 국가 안보 인력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 (Presidential Memorandum of October 5, 2016)
 -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소의 "다양성" 증진 활동 및 차별 철폐 조치 의무 부과
- **연방 기관:** DEI 정책 및 프로그램 종료, 실력 기반 고용 및 계약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민간 부문:** 기존 DEI 정책 재검토 및 고용, 승진, 계약 등 모든 분야에서 실력 기반 시스템 구축 재정립 필요. 구체적으로, 연방 계약 또는 보조금 수여 시 '차별 금지 법률 준수' 의무화 및 민간 기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조사 등 검토

결론적으로 본 행정명령은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DEI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력 기반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STORING THE DEATH PENALTY AND PROTECTING PUBLIC SAFETY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제도의 합법성과 범죄 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사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형이 요구되는 모든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함. 특히, 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을 살해한 경우, 불법체류자가 사형 대상 범죄(capital crime)를 범한 경우에는 다른 요소를 불문하고 사형을 구형할 것을 지시함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주 정부가 사형 집행 약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형제도를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들의 파기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III. Sanction

DESIGNATION OF ANSAR ALLAH AS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바이든 행정부가 예멘 후티족 반군(안사르 알라)을 외국테러조직(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FTO)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하고, 국무장관에게 해당 단체를 FTO 로 재지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국무장관은 국가정보국 및 재무부와 협의하여 안사르 알라의 FTO 재지정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바이든 행정부의 FTO 지정 해제 후 안사르 알라가 미군을 여러 차례 공격하고 동맹국의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였으며,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100회 이상 공격하여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함

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1 월 20 일 행정명령을 통하여 이전 행정부의 78 건의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지원테러단체 (State Sponsor of Terrorism, SST)로 지정되면 쿠바에 대한 군수용 물품이나 기술의 재수출 시에 강화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경제제재 측면에서는, 미국인은 쿠바의 SST 지정으로 쿠바 정부와 금융거래 시에 OFAC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쿠바는 미국의 포괄제재 대상 국가여서 미국인은 쿠바 관련 거래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점은 변화가 없었으므로, SST 지정 해제 및 재지정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는 없습니다.

- The Presidential Memorandum of January 14, 2025 (Certification of Rescission of Cuba's Designatio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V. 이민(국경)

SECURING OUR BORDERS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남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한 점은 지난 뉴스레터에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1 월 20 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4 일 이내에 국무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장관은 미국을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남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권한의 사용에 관해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남부 국경의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국토안보부장관에 물리적 장벽을 건설하고 가용 인력 배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캐치 앤 릴리스 정책 (catch-and-release) 종료 등 이민법 위반 외국인들의 구금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주자 보호 프로토콜을 재개하여 망명 신청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며, "CBP one", "Processes for Cubans, Haitians, Nicaraguans, and Venezuelans" 등 가석방 정책을 종료하여 외국인의 입국 촉진 수단을 차단하고자 함
- 법무부장관과 국토안보부장관에게 구금된 외국인에 대해 DNA Fingerprint Act of 2005에 따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주장된 가족관계의 유효성 판단을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과 절차를 사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과 국토안보부장관은 미국 국경과 관련한 인신매매, 아동매매, 성범죄 등 범죄 조사와 기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Authors

정영진

02-3703-1776
youngjin.jung@kimchang.com

박정택

02-3703-1282
jtpark@kimchang.com

황민서

02-3703-1631
mshwang@kimchang.com

황형준

02-3703-1546
hyeongjun.hwang@kimchang.com

박소연

02-3703-8471
soyun.park@kimchang.com

김성중

02-3703-1075
seongjoong.kim@kimchang.com

송지연

02-3703-1859
jiyeon.song@kimchang.com